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수능제'와 '교과편식'의 문제

- 최근 10년 사회탐구 과목의 선택현황을 중심으로\*

김덕수\*\*

###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수능제가 심화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최근 10여 년의 수능 사탐 과목 선택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학입시가 우리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택수능제는 국영수를 사실상 공통 필수로 하고, 대학의 인문계열 수험생에게는 과학탐구영역을 제외한 사회탐구영역 과목만을, 그것도 다수의 과목들(사탐 10과목, 과탐 8과목) 중에서 소수의 과목(2과목)만을 선택 하도록 한 선택수능제는 인문계열 지망 학생은 과학 교과에, 자연계열 학생은 사회 교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수업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영수 외에 탐구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만을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다보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을 과목의 수업이 진행될 때 수업집중도가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교사들도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탐이나 과탐의 선택과목의 수가 2014학년도부터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 들면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수능 사탐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교육적 중요정보보다는 수능시험에서 얼마나 점수따기에 유리한지에 따른 비교육적 동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서 꼭 필요한 과목들(예를 들면 세계사나 세계지리 등)조차 상대적으로 내용 요소가 많거나 어려워 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기피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목선택 범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선택수능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에서는 단대별로 또는 학과별로 꼭 필요한 과목조차 이수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EBS 수능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3. 12. 6)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deogsu@snu.ac.kr)

2 교육연구와 실천 제80권 (2014. 7. 31)

과목이든지 혹은 일종의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해서 기초학력을 보강하고 명실상부하게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고 대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핵심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선택중심교육과정, 학생선택권, 제7차 교육과정

## 1. 서언

매년 1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993년 처음 시행된 뒤 작년 가을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이 시행 20주년을 맞이했다. 수능 시험 당일 아침은 경찰이 입시생 수송 '작전'에 돌입하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한 시간씩 늦어지는 등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입시생을 둔 가정은 그야말로 초긴장의 하루를 보낸다. 게다가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논술/면접) 등 3개 요소로 입시를 치르는 상황에서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을 표방한 정부 방침에 따라 수능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한 정권하에서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입시제도는 개혁안의 발표, 반대 여론의 비등, 수정안 발표를 거듭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2009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시험 과목명, 출제 범위 등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기존 수능과 비교할 때 영역의 명칭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영역으로 바뀌었고, 세 영역에서 각각 A/B형 수준별 시험이 실시되었다.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선택과목 수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으며 직업탐구영역에서 시험 과목의 통합이 있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는 『기초 베트남어』가 추가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11월 27일(수)에 2013년 11월 7일 목요일에 치러진 수능의 개인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하면서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sup>1)</sup> <표 1>에서 보듯이 201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606,813명**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영역들에서 **사회탐구영역에 337,134명, 과학탐구영역에 235,946명,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60,209명**이 응시했고, 총 응시자 대비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57.5%, 40.3%, 9.9%이었다.

<표 1> 영역별 응시자 현황

영역	총 응시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사회	과학	직업	계	
인원(명)	608,813	606,074	572,914	596,478	337,134	235,946	13,100	586,180	60,209
비율(%)	100	99.9	94.4	98.3	(57.5)	(40.3)	(2.2)	96.6(100.0)	9.9

탐구영역 중 인문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사회탐구는 10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연

1) 2013. 11. 27(수),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숫자나 비율, 내용을 추가했다.

4 교육연구와 실천 제80권 (2014. 7. 31)

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과학탐구는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유롭게 택하도록 되어 있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원하는 학생만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사회탐구영역 응시자 337,134명의 과목별 응시 현황

순위	과목명	인원(명)	수능 응시자 606,813명 대비(%)
1	사회문화	155,249	25.6
2	생활과 윤리	137,054	22.6
3	한국지리	112,459	18.5
4	윤리와 사상	71,114	11.7
5	한국사	42,529	7.0
6	법과정치	38,203	6.3
7	세계지리	37,684	6.2
8	동아시아사	36,982	6.1
9	세계사	28,772	4.7
10	경제	13,420	2.2

<표 3> 과학탐구영역 응시자 235,946명의 과목별 응시 현황

순위	과목명	인원(명)	수능 응시자 606,813명 대비(%)
1	생명과학 I	137,375	22.6
2	화학 I	136,761	22.5
3	지구과학 I	78,836	13.0
4	물리 I	52,692	8.7
5	생명과학 II	39,676	6.5
6	지구과학 II	10,442	1.7
7	화학 II	10,200	1.7
8	물리 II	5,758	1.0

<표 4>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자 60,209명 중 과목별 응시 현황

순위	과목명	인원(명)	수능 응시자 606,813명 대비(%)
1	기초 베트남어	22,865	3.8
2	아랍어 I	9,969	1.6
3	일본어 I	7,884	1.2
4	한문 I	6,329	1.0
5	중국어 I	5,782	1.0
6	프랑스어 I	2,007	0.3
7	스페인어 I	1,894	0.3
8	러시아어 I	1,745	0.3
9	독일어 I	1,734	0.3
		60,209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탐구영역이나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률에서 과목들 간에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표 2>의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의 선택률이 높고 『경제』, 『세계사』의 선택률은 아주 낮으며, <표 3>의 과학탐구의 경우 『생명과학1』, 『화학1』의 선택률이 높고 『물리Ⅱ』의 선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상황은 수능 과목 선택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 과목에 포함되어 올해 처음 수능 무대에 ‘출전’한 『기초 베트남어』가 작년 ‘챔피언’ 『아랍어』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차지했다. 『아랍어』는 작년에 1,565개 고등학교 중 단 세 곳만이 『아랍어』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한문 총 응시자 67,782명 중 27,844명(41%)이 응시해서 수능 ‘로또’ 과목이 된 바 있었는데, 금년에는 응시자 수가 9,969명(17%)으로 감소하였다. 그 대신에 단 두 고등학교에서만 개설된 『기초 베트남어』가 응시생 60,209명 중에서 22,865명(37%)이 선택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sup>2)</sup> 이 글은 여러 과목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수능 교과목 선택제 하에

2)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선택률은 수능 선택제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많은 대학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과목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벼락치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 내내 집중해서 공부하고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해도 1-2등급을 맞기가 어려운데, 아랍어나 베트남어와 같은 외국어는 길게는 3달, 짧게는 1달만 공부해도 1-2등급이 가능하고, 단 이를 공부해서 『아랍어』 과목 3등급을 맞은 학생도 있다고 하니 ‘로또’ 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몇몇 중상위권 대학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사탐 한 과목 성적과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서 최근 10여 년간의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의 선택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탐구 과목, 특히 사회탐구 과목의 선택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과행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2. 최근 10년간 수능 사탐 과목 선택현황

2004년 가을에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 교과목 선택제가 도입되고 이에 맞추어 선택형 수능체제가 처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수능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11개 선택과목에서, 과학탐구영역에서는 8개 선택과목에서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고, 문과 계열 학생은 사탐 과목만을, 이과 계열 학생들은 과탐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0년 동안 과목명이나 그 수가 다소 조정이 되었고, 선택과목 수가 축소되었지만 기본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과목 선택제는 대학이 모집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영역/과목별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이수를 보장하고자 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sup>4)</sup>

<표 5> 사회탐구 과목명과 선택과목 수의 변화(2005학년도~2014학년도)

교과	2005학년도 (총 11과목 중 택4)	2012학년도 (총 11과목 중 택3)	2014학년도 (총 10과목 중 택2)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좌동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좌동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일반사회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좌동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윤리	좌동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최소 55만 명, 최대 67만 명이 응시한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별 선택 현황(<표 6>)을 보면 선택률의 심각한 불균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과목 선택제와 선택과목의 축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탐 과목 중에서 선택률이 가장 낮은 『세계사』나 『세계지리』는 평균 60만 명 중에서 3만

3) 2014학년도 수능 사탐 과목의 변화를 들면 지리군에서 『경제지리』를 폐지하면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통합하였고, 역사군에서는 『국사』와 『근현대사』를 신설된 『한국사』로 통합하고 『동아시아사』를 신설하였으며, 사회군에서는 『법과 사회』와 『정치』를 통합하여 『법과 정치』를 신설, 윤리군에서는 기존의 『윤리』 과목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로 나누었다.

4) 김신영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22 (1), 14-15.

명 내외가 응시한 것으로, 그리고 거의 매년 선택률 1위를 차지한 『사회문화』는 22만 명에서 28만 명의 학생들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의 선택 결과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있어 '(학생) 선택권'의 실현이자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과목 선택률은 곧 이 나라와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주역이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연마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표 7>에서 보듯이 전국의 수능 과목 선택률이 서울대 입학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 현황과 그것이 지닌 함의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8 교육연구와 실천 제80권 (2014. 7. 31)

<표 6> 2005학년도~201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지원현황

학년도	응시인원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2005	574,218	과목명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한국근현대사	국사	정치	경제	법과사회	세계사	경제지리	세계지리
		인원수	232,370	229,100	179,697	171,591	159,052	98,856	84,485	54,911	30,006	29,671	29,614
		비율(%)	40.5	39.9	31.3	29.9	27.7	17.2	14.7	9.6	5.2	5.2	5.2
2006	554,345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국사	경제	법과사회	경제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인원수	225,633	211,526	172,706	158,584	102,487	100,189	86,666	62,584	47,784	33,346	32,816
		비율(%)	40.7	38.2	31.2	28.6	18.5	18.1	15.6	11.3	8.6	6.0	5.9
2007	551,884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사회	경제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인원수	227,422	214,499	168,414	161,421	106,392	88,068	69,507	62,434	54,286	37,917	33,120
		비율(%)	41.2	38.9	30.5	29.2	19.3	16.0	12.6	11.3	9.8	6.9	6.0
2008	550,588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사회	경제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인원수	231,950	221,773	174,834	165,127	108,958	84,239	57,570	57,009	52,925	40,047	34,838
		비율(%)	42.1	40.3	31.8	30.0	19.8	15.3	10.5	10.4	9.6	7.3	6.3
2009	559,475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사회	경제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인원수	247,329	220,083	193,905	171,001	113,083	80,559	58,635	56,111	54,104	40,551	33,549
		비율(%)	44.2	39.3	34.7	30.6	20.2	14.4	10.5	10.0	9.7	7.2	6.0
2010	638,216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사회	경제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인원수	280,470	248,246	233,487	188,966	127,937	84,837	69,704	63,735	61,375	49,094	38,785
		비율(%)	43.9	38.9	36.6	29.6	20.0	13.3	10.9	10.0	9.6	7.7	6.1
2011	668,991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경제	국사	법과사회	세계지리	경제지리	세계사
		인원수	287,918	238,620	236,487	200,806	124,623	75,372	63,838	63,520	56,531	52,890	42,428
		비율(%)	43.0	35.7	35.3	30.0	18.6	11.3	9.5	9.5	8.5	7.9	6.3
2012	648,946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법과사회	세계지리	국사	경제	세계사	경제지리
		인원수	239,665	187,941	167,236	152,976	92,602	46,838	43,840	43,441	41,726	31,158	29,999
		비율(%)	36.9	29.0	25.8	23.6	14.3	7.2	6.8	6.7	6.4	4.8	4.6
2013	621,336	과목명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윤리	정치	법과사회	국사	세계지리	경제	세계사	경제지리
		인원수	221,473	172,165	158,269	150,657	82,766	43,918	39,032	38,151	32,701	29,683	20,498
		비율(%)	35.6	27.7	25.5	24.2	13.3	7.1	6.3	6.1	5.3	4.8	3.3



<표 7> 서울대 합격자 수능 사회탐구영역 지원현황(2009학년도~2014학년도)

학년도 (과목수)	총 응시 누적인원 (학생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2009 (4)	5,684 (1,421)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대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윤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사	경제 지리	세계 지리
		인원수	1,421	833	783	763	585	522	301	207	122	75	72
		비율 (%)	100	58.6	55.1	53.7	41.2	36.7	21.2	14.6	8.6	5.3	5.1
2010 (4)	5,944 (1,484)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대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윤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인원수	1,484	965	875	754	626	522	332	134	114	69	69
		비율 (%)	100	65.0	59.1	51.0	42.2	35.2	22.4	9.0	7.7	4.7	4.7
2011 (4)	5,960 (1,488)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대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윤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경제 지리	세계 사
		인원수	1,488	1,042	842	738	678	535	288	147	78	62	62
		비율 (%)	100	70.0	56.6	49.6	45.6	35.9	19.4	9.9	5.2	4.2	4.2
2012 (3)	4,505 (1,500)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대사	사회 문화	윤리	한국 지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1,500	645	606	491	442	423	172	110	47	37	32
		비율 (%)	100	43.0	40.4	32.7	29.5	28.2	11.5	7.3	3.1	2.5	2.3
2013 (3)	4,347 (1,377)	과목명	국사	한국 근현대사	사회 문화	윤리	한국 지리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세계 지리	세계 사	경제 지리
		인원수	1,377	708	630	489	425	344	175	86	63	37	13
		비율 (%)	100	51.4	45.8	35.5	30.9	25.0	12.7	6.2	4.6	2.7	0.9
2014 (2)	합격생 652	과목명	한국 사	사회 문화	윤리 와사 상	한국 지리	경제	법과 정치	동아 시아 사	생활 과윤 리	세계 지리	세계 사	수시 일반 지원 생들 수능 성적 미만 영
		인원수	652	189	123	114	79	53	35	25	22	12	
		비율 (%)	50	14.5	9.5	8.7	6.0	4.1	2.7	1.9	1.9	0.9	

### 3. 대학입시 자료로서의 수능의 도입과 ‘선택수능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는 고등학교 내신, 수능, 대학별 논술 또는 면접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고, 반영 비율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다. 그 중에서 수능은 국가가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학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sup>5)</sup> 고등사고능력의 측정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수능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상대 평가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그 명칭과 성격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대입 평가 자료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수능은 1986년 대통령직속 심의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가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체하는 시험으로 범교과적 학업 적성 평가를 위한 ‘대학입학적성시험’을 제안하면서 태동하였고, 선행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1993년 2월 교육부의 새 대학입학시험제도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명된 후 같은 해 8월 20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다가 2005학년도에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고시, 2002년 고등학교에 적용)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선택수능제’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고교 과정(계열)에 따른 구분 응시가 폐지되었고, 다만 수리영역에서 수준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선택 응시하도록 하였으며,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개 영역만 택하여 최대 4과목(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선택수능제’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진학 계열을 고려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취지였고 선택과목 수가 4과목에서 2과목까지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6)</sup>

‘선택수능제’의 토대는 1992년에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내걸고 등장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공히 공통필수과목**으로 『국사』, 『국민윤리』, 『한국지리』, 『정치경제』, 『세계사』가 있었고, 인문계열의 필수과목으로 『사회문화』와 『세계지리』가 있었다. 그러나 1996년 고등학교에 적용된 제6차 교육과정 연구진은 학습자 부담의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통 필수과목의 축소** 및 필요와 능력 수준에 따른 **과목 선택의 확대**, 주당 수업시수와 학기당 이수과목의 축소, 유사과목 중복교과의 통폐합, 교과 구조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고<sup>7)</sup>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치러진 1999학년도 수능은 수리·탐구(Ⅱ)의

5) 김신영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 22 (1), 2.

6) 양길석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 (4), 770-771.

7) 김성자 (2014). 「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탐구영역에서 인문계 및 예체능계는 **필수과목(공통사회8)+국사+윤리 79%)과 선택과목 1개(21%)<sup>9)</sup>**를, 자연계는 **필수과목**을 응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리·탐구(Ⅱ)의 과학탐구영역에서 인문계 및 예체능계는 공통과학을, 자연계는 공통과학(67%)에 더하여 선택과목 1개(33%)를 응시하게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체제가 도입된 것은 향후 교육과정이나 수능시험체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다만 선택과목의 결정권이 학생이 아닌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이수단위인 204단위에서 특별활동 16단위를 제외한 교과 시수 단위가 188단위였는데, 68단위를 교육부가 공통 필수교과목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20 단위는 선택교과목으로 편제하여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과 단위 전체 188단위를 놓고 교육부가 36%, 시도 교육청이 51%, 단위학교가 13%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sup>10)</sup> 제6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체제 도입은 그동안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던 교육과정 편제 결정권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위임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편제 결정권을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하는 방향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sup>11)</sup>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강조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면서 양과 질에서 더욱더 확대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은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대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정을 강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sup>12)</sup> 학생들은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최대 50%(68단위)까지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3)</sup> 학생들은 28단위 이상 68단위 이내의 범위에서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는 것은

---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17.  
 8) 공통사회=한국지리+ 일반사회  
 9) 선택과목 택1(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10) 한명희 외 (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12.  
 11) 김성자 (2014). 「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31.  
 12) 김성자 (2014). 「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133.  
 13)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20 (4), 88.

그동안 학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과목을 무조건 배워야하는 관행을 벗어나려 했다는 데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선택수능제’는 우선 인문계와 자연계라는 계열 구분을 없애고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계열을 택하고 그 안에서 관련된 과목만을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수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했다. 즉 대학의 자연계 학과 지망생은 사회탐구 과목 중 인문계 필수과목을, 인문계 학과 지망생은 과학탐구의 공통과학을 수능 시험과목에서 응시하지 않게 함으로써 교양과 균형을 골고루 갖춘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할 교육의 큰 목표를 구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제 7차 교육과정부터 확대 적용된 수능의 탐구영역 선택제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우선 홍후조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선택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과정 결정 주체로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와 최종 선택 주체로서 학생이 일반선택과목 혹은 심화선택과목과 같은 선택대상들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이를 주체위주선택교육과정이라 명명함)고 전제한 뒤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1) 선택교육과정임에도 학생들은 필수와 다른없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2) 선택 주체와 선택 대상, 양자에 의한 선택 규정은 상호 충돌을 일으키며 이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은 선택 교육과정의 취지를 왜곡하게 된다. 3) 다수의 결정 참여자에 의해 선택교육과정 실현에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 4) 각 교육 주체가 선택교육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로 정리했다.<sup>14)</sup> 그리고 결론에서 홍후조는 “교육이 학습자의 더 나은 공부와 삶을 열어주기 위한 교수자로 대표되는 앞 세대의 배려라고 하면 교육과정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학생을 위해 베풀어지는 것이며 선택교육과정의 진정한 주인은 학생”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만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선택교육과정의 설계는 주체 위주에서 대상 위주로 전환되어야하며 이 때 교육청, 학교, 교사와 같은 교육 주체들은 진정한 선택 주체인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와 진로, 적성과 능력에 합치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선택대상들을 설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한편 소경희는 전국적으로 30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표집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선택권’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제안한 바가 있다. 소경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선택권’의 특징

14)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과연구』 40 (1), 179-188.

15)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과연구』 40 (1), 191-192.

을 첫째, 과목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과정'선택권이고, 둘째 '적극적'보다는 '소극적' 선택권, 셋째 '자유'보다는 '제한' 선택권이라고 요약했고,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정별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과정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도 과목 군별 혹은 과목군내 교과별로 개설된 2-3개의 과목 중에서 '택 1'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양적으로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의 폭은 제한되는 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실제 단위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학교가 설계한 '과정'이나 '교과'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sup>16)</sup>

소경희는 이러한 지적과 함께 학생의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과목선택권을 양적으로 일부 부여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선택권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으로 국가가 규정하는 졸업 이수 단위의 축소와 학교 단위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단위 학교에서 학생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과정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학생 또는 학교의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홍후조나 소경희의 결론은 현실성이 있는 진단이라 보기 어렵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 또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의문이 든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나라 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에 발목이 잡혀 있고, 외고, 특목고, 국제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고에 비해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가진 학교들이 더욱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과편식'을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석사학위 논문에서 132명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사회과 선택과목의 선택 현황과 이유를 설문하고 논증한 김용운은 수능 선택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sup>17)</sup> 사회탐구의 경우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해서 가르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학교가 일정한 기준으로 몇 개의 과목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사회과 선택과목 선정시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학생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101명, 76.5%), '일부 반영되었다'(15명, 11.3%), '모르겠다'(11명, 8.3%), '많이 반영되었다'(5명, 3.7%)순으로 답했다.<sup>18)</sup>

16)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20 (4), 100.

17)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8)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

선택과목 선호도가 높은 『사회문화』(132명 중 90명 선택, 68%)의 경우 ‘수능에서 점수받기 유리’(64명, 71%),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13명, 14.4%),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10명, 11.1%), ‘담당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3명, 3.3%) 순으로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반면에 선택률이 가장 낮은 『세계사』(132명 중 10명 선택, 7.6%)의 경우 선택 이유가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6명, 60%),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2명, 20%), ‘담당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와 ‘수능에서 점수받기 유리’(1명, 10%) 순으로 나타났다.<sup>19)</sup> 실제로 『사회문화』가 수능에서 점수 받기 유리한 과목인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응시생 대비 만점자 비율로 알아볼 때 2012학년도에서는 11과목 중 6번째, 2013학년도에서는 9번째를 기록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과와 내용이나 시험 준비가 쉽다는 생각이 수험생들에게 작용한 것 같다.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의 수업이 진행될 때 수업 집중도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설문 대상 132명 중 102명(77.2%)이 수능 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상관이 없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집중하지 않았다”, “아무리 수업시간이라도 수능이 코앞이라 선택과목 공부가 더 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공부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교사의 반응에 대한 설문에서도 62명(46.9%)이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34명(25.7%)이 ‘프린트물 등 수업 자료만 제공하였다’고 학생들이 답했다.<sup>20)</sup> 결국 11과목 또는 10과목에서 3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수능 선택제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 집중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50.

19)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45. <표 V-9> 각 과목의 수능 선택 이유

20)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51-52.

#### 4. 결어

도입된 지 20여 년을 다해가는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시험으로 출발하였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이 확대된 제7차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기본 정신은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이 가세하면서 출발 당시 최대 4과목 선택이었던 탐구과목(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의 선택 수는 2014학년도 수능에서 2과목으로 축소되었고 국영수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며, 학생들의 교육에서의 '영양결핍'은 심화되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탐구과목들의 선호 또는 비선호도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고등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에 대한 '편식' 현상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sup>21)</sup>

더 심각한 문제는 선택과목의 선호도가 단지 시험 준비와 고득점에 얼마나 유리한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사실상 대학입시 준비기간인 현실 하에서 입시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과목들은 그 교육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아예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일선 현장의 담당 교사들은 호소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세계사』나 『세계지리』와 같은 과목은 학습 부담이 다른 사회교과들에 비해 크다는 이유로 거의 ‘고사’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능 선택현황과 극단적인 교과편식 현상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합격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는 그동안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왔고, 이번 수능에서는 『국사』와 『근현대사』가 통합된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였으므로 실제 학생들은 사회탐구 10과목 중에서 『한국사』를 제외한 한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의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과 교과편식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학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수험생들의 일부를 합격생으로 받아 교육을 시켜야 하는 대학 당국은 ‘교과편식’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물론, 문제의식마저 여전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 교육부 당국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목)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2017학년도 수능체제의 현행 골격 유지, 중장기적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체제 개

21) <표 5>는 2005학년도부터 지난 2013학년도까지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평가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편 검토,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쉽게 출제,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완화 유도, 성취 평가제의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 까지 유예, 내년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 방식 개선 등이다. 덧붙여 “융합형 인재 육성의 필요성 및 의견 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하여 금년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수능 탐구과목의 선택 제도가 초래한 ‘과목편식’의 폐해를 수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 선택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다. 학생들의 교과 편식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택과목들 중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들을 통폐합하고 내용요소를 축소하여 꼭 필요한 학습내용으로 필수화하는 것이다. 사실 제6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문과·이과 간에도 사회과와 과학과를 교차해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문과 학생은 과학을 배우지 않고 이과 학생은 사회과를 배우지 않는 현행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진출할 때 보편적인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문과 이과 내에서 조차 선택과목 수를 극히 줄임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처럼 문과 학생들이 10개 중에서 2개를, 이과 학생들이 8개 중에서 2개는 ‘마음대로’ 선택하게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중요하지만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기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정책의 연구자나 교육 당국은 이제 선택수능제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대학 차원에서는 단기처방으로라도 각 학과마다, 입시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과목편식’을 한 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비선택과목들에 대해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금년 초부터 서울대학교 안에서 입학본부, 기초교육원, 교무처에 그리고 대학신문을 통해 이러한 탐구과목의 지나친 ‘과목편식’ 문제를 알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22)</sup> 서울대 입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전공에서 깊이 있게 학문을 연마해 갈 수 있도록, 사회·과학 교과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 입학 전에라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첫 번째는 각 학과가 대학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과목들(사회 교과, 과학 교과, 예체능 교과)을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학습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역사교육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

22) 김덕수 (2013). 『대학신문』, 「대학에서라도 세계사 교육이 보충되어야 한다」



아사』 중에서 적어도 두 과목 이상은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생들 중에서 필요한 기초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입학 전인 2월 한 달 동안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는 EBS 수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면 사범대학 부설학교 해당 교사들에 인터넷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은 인터넷 강의를 통한 보수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제도의 개선에 있다. 사실상 그동안 입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 수능 교과목 선택제가 학생들의 '교과편식'을 낳아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대안의 연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는 인류 평화와 화합, 다문화, 다원화의 가치를 외치지만 실상은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점점 더 노골화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영양실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관련 연구자 및 교사가 공동의 연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지,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선택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만일 학생들의 선택률이 낮은 '비인기' 과목들(『세계사』, 『세계지리』, 『지구과학』 등)이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과목들이라면 그러한 점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고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폐지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입시와 교육제도는 특정 교과들이 부당하게 '고사'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수험생에게 약삭빠른 기회주의와 '편식'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제도로만 기능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창의성을 갖춘 세계화된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탐구과목의 선택체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과목을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는 세계화 시대에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따라서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우리 사범대학이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sup>23)</sup>

23) 본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고, 2014. 5. 26.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4. 7. 11. 게재가 확정되었음.

## ❖ 참고 문헌

- 국립교육평가원 (1994).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계획.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채점결과 보도자료 (2013.11.2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09a).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2009b). 『사회과 선택과목 개정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역사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24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2012a). 『사회 과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2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 교육부 (199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7].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 김성자 (2014). 「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신영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평가연구』22 (1), 1-27.
- 김용운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 선택과목 편중현상의 분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선택권’의 의미와 구현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20 (4), 87-106.
- 양길석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교육평가연구』, 23 (4), 765-791.
- 한명희 외 (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 홍후조 (2001).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서 ‘과목’ 선택 ‘교과영역’ 선택」, 『교육

과정연구』, 19 (2), 53-76.

홍후조 (2002). 「선택 '주체' 위주의 선택교육과정 설계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과연구』, 40 (1), 171-195.

〈Abstract〉

The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Seriousness of ‘unbalanced selected subjects’

Deogsu KI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ate the problems of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fter the 7<sup>th</sup> national curriculum the students could choose the 4 subjects in the areas of social studies’ 11 subjects, but the number was reduced to 2 subjects by 2014 CSAT. Many students want to learn only the ‘easy’ subjects (for example, Society and Culture, Korean Geography,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are reluctant to choose the World History or World Geography, because those subjects need many contents and much time to learn. On the other hand, they gave much time to study the ‘important subjects’, such as Korean language, Mathematics, English. The ‘unbalanced selective subjects’ were and are very serious. At first we need to review and reform the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finally students can learn and not avoid the ‘really important subjects’. Secondly I propose that university authority provide the additional program to the fresh men who did not learn the world history or geography etc,.. We live o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t will continue to be a major force in the future. We need to educate the students to understand world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m, and to contribute to the world peace and better international friendship.

**【Keyword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reas of social studies, selective centered curriculum, the students’ selective right, the 7<sup>th</sup> national curriculum